

이재명 정부 '진짜성장' 3·3·5 전략, 구체성·지속성에 달렸다



그래픽=김용수 기자 kys404@viva100.com

정책탐구생활 경제산업 정책 방향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 산업 정책의 열쇠말은 '성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임사에서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간 시간"이라며 민생과 경제의 성장 회복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불균형 성장 전략이 한계를 드러내고 불평등에 따른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게 됐다"며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 발전전략을 대전환해야 한다. 균형발전, 공정성장 전략, 공정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불균형 성장 전략이 한계를 드러내고 불평등에 따른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게 됐다"며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 발전전략을 대전환해야 한다. 균형발전, 공정성장 전략, 공정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공약집과 국정기획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경제 산업 정책의 방향은 '성장'이다. 잠재성장률 하락 등 저성장 국면에 들

어든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회복시켜 경제를 성장시키고 그 열매를 포용적 사회로 돌려주겠다는 논리이다. 이 대통령은 이를 '진짜성장'이라며 차별성을 강조한다.

이 '대한민국 진짜성장'은 AI 3대 강국·잠재 성장률 3%·국력 세계 5강을 통한 경제·산업 대도약이라는 비전하에 기술주도 성장·모두의 성장·공정한 성장이라는 3대 전략을 제시했다. 현재 AI 7위권, 잠재성장률 2% 이하, 국력 6-12위 수준을 경제·산업 대도약으로 AI 3위, 잠재성장률 3%, 국력 5강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3대 전략인 기술주도성장(산업 대도약)은 미래를 선도할 전략산업을 키우고 기술 패권 경쟁과 통상 환경 변화에 대응, 산업·수출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해 성장동력을 강화(기업한다)는 구상이다. 이어 모두의 성장(국민 참여 성장)은 성장영역 확대(국민)로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공정한 성장(공정경제와 상생)은 지대추구와 갑의 횡

포를 극복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로 모두가 상생하는 성장으로 성장유인을 제고(정부)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면서 진짜성장을 위해 AI 3대 강국 진입과 미래전략산업 육성, 에너지 전환과 산업 업그레이드, 지역성과 국토 공간 혁신, 중소벤처 성장과 과학기술혁신 생태계, 공정과 상생의 시장질서 구축 등 5대 과제를 제시했다.

◇AI, 'ABCDE' 미래전략산업 집중 육성
진짜성장론에 따르면 AI 3대 강국 진입과 미래전략산업육성을 위해 연구개발(R&D), 투자, 인프라 구축이 집중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제조 AI 등 산업별 융합 촉진과 AI 활용 선도 사업 추진 및 확산 기반을 조성하는 등 인공지능 전환(AIX)으로 혁신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범국가적 인공지능 대전환 전략을 수립·추진하기 위한 AI 전략기구 설치, 최신 GPU를 확보한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해 AI 고속도로 구축, 2030년 AI 중심 차세대 네트워크(6G) 상용화를 추진한다. AI·바이오·콘텐츠·방위산업·에너지·제조업(ABCDE)의 글로벌 기업 육성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이다.

첨단산업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한 미래 첨단 제조 K-퀀텀점프(대도약)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한국형 마더팩토리 전략으로 소재·부품·공급망 강화와 산학연 혁신 생태계를 조성한다. 특히 국민·기업·정부·연기금이 참여할 수 있는 100조원 규모의 대규모 국민펀드를 조성해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할 수 있게 하고 국민·기업의 투자금에 대해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한다는 계획이다.

◇RE100 전용 산단 조성...2030년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에너지전환과 산업 업그레이드를 위해 오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추진과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 수립, RE100 대전환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 강화, 경기 남동부 RE100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전남 RE100 산업단지 조기 구축 등 RE100 전용 산단 조성으로 한국 기업의 RE100 역량을 강화한다. 2030년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및 2040년 U자형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중소벤처 및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확립을 위해 연간 40조원 벤처투자시장을 육성한다는 구상을 제시하고 있다.

◇공정성장 제시...중소기업 단체협상권 부여,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성장의 다른 한 축으로 '공정성장'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중소기업의 협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거래 조건 등 단체협상권 부여, 포용·성장·혁신금융 등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술을 탈취한 기업은 망한다'는 대원칙으

로 입법과 정책 집행 및 사회분위기 조성,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특히 침해 입증을 위한 증거 수집 제도) 도입을 통해 공정경제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다.

이 대통령은 특히 주식시장 등 자본시장의 '공정한 시장질서' 구축을 강조했다. 추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행위에 대한 윈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한국형 페어펀드(공정배상기금)를 도입해 투자자 피해구제 강화, 상장법인 임직원·주요주주 등이 단기매매차익을 취득한 경우 해당 법인이 매매차익을 반환구하도록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주주 대한 이사 총실의무 명문화...독립이사 일정비율 의무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이를 위해 주주에 대한 이사의 총실의무를 명문화해 주주 전체의 이익이 고려될 수 있도록 원칙을 제시하고 독립이사를 일정 비율 이상 선임토록 의무화, 대규모 상장회사 집중투표제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산업정책은 생산성 향상 등을 가져올 수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삼일PwC(삼일회계법인) 경영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21대 이재명 정부 출범, 한국 경제의 기회와 과제' 보고서에서 AI 기반 신성장 동력 전략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이 기대되고 또 재생에너지 확대와 RE100 산업단지 지원 등으로 친환경 제조 기반이 강화돼 수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평가했다.

◇"기업의 생산성 향상 기대"...구체적 계획 마련 필요 지적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로드맵) 마련과 정책 지속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삼일PwC 경영연구원의 이 보고서는 AI 공약에 대해 투자 재원 확보, 인프라 구축, 인재 확보에 대한 현실적이고 실행 가능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실행 기반(법제화 등) 마련도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세수 확보와 경제구조 개혁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팀장은 "조세 정상화와 증세 등을 통한 세수 확보로 향후 늘어날 복지지출을 감당해야 함에도 이러한 공약이 없다는 점에서 우려감이 크다"며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경제분야 개혁과제를 제시했고 일부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국정과제에 포함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재명 정부는 공약을 보완·추기해 경제구조를 개혁할 수 있는 국정과제를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